

중국변호사로부터 듣는 '중국 투자시 알아야할 법률적 유의사항' (중)

중국의 외자도입 제도와 유리한 투자형태

글 _ 탕예(중국 준해(君舍) 법무법인 변호사)

번역 및 정리 _ 변중원(거성통상 대표, 《기술수출 노하우 및 국제계약 실천사례》 저자)

중 국 정부는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2년동안 외자 관련 법률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시장개방을 활발하게 하였다. 그로 인해 외자기업의 투자속도가 늘어나고 투자 분야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번호에서는 중국투자를 구상하고 있는 기업이 알아야할 중국 정부의 외자도입제도와 심사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외자기업의 투자형태에 대해 알아보자.

외자도입 제도와 심사 기준

중국정부의 외자도입 제도는 크게 권장형, 규제형, 금지형, 허가형 등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허가형을 뺀 대표적인 제도의 중요 항목을 살펴보자. (더 자세한 사항은 별도 연락 요함)

(1) 투자방향

1) 권장형 투자항목

- ① 농업신기술, 농업종합개발과 에너지원, 교통, 중요 원재료 공업에 속하는 항목
- ② 고신(高新)기술, 선진적용기술, 제품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고 기술경제 효과를 높이는 항목
- ③ 시장수요에 적응하여 제품등급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혹은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항목
- ④ 새로운 기술과 설비, 에너지원과 원자재를 줄일 수 있고 자원과 재생자원을 종합 이용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항목
- ⑤ 중부와 서부지역의 우수한 인력과 풍부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고,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는 항목

2) 규제형 투자항목

- ① 기술수준이 낙후한 항목

- ② 자원절약과 생태환경 개선에 불리한 항목

- ③ 국가에서 보호하도록 규정한 발굴과 특정광물 탐사관련 항목

- ④ 국가에서 점차 개방하는 산업에 속하는 항목

규제형 투자항목 중 제품수출 판매액이 판매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허가유형'으로 볼 수 있다.

3) 금지형 투자항목

- ① 국가의 안전과 사회 공동이익에 해를 주는 항목
- ② 환경 오염과 자연자원 파괴, 인체건강에 유해한 항목
- ③ 대량의 농경지를 차지하고 토지자원 보호와 개발에 불리한 항목

(2)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외자 심사 비준제도

중국정부는 투자항목의 분류와 투자총액의 크기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심사 비준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투자총액은 외자투자기업이 그 생산경영 규모에 따라 투자한 전체 금액을 말한다. 중국의 외자법은 투자기업이 반드시 문서작성 시에 투자총액을 정할 것을 요구한다.

- 1) 국무원 심사 항목 : 투자총액이 1억달러를 초과한 항목

- 2) 중앙정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 심사항목 : 총 투자액이 3000만달러 이상인 항목

- 3) 성급 정부계획 부문과 경제무역부문 심사항목 : 총 투자액이 3000만달러 미만인 항목

외자기업 투자의 형태

(1) 중외 합자(合資) 경영기업

- 1) 합영기업(Joint Venture)은 두개 혹은 두개 이상의 주체가 공동으로

투자·경영하고 함께 위험과 손익을 나누는 기업이다. 합영기업 종류는 주식형(Equity Joint Venture)과 계약형(Contractual Joint Venture) 두 가지가 있다. 중외 합자 경영기업은 외국회사나 개인이 중국정부의 심사비준을 거쳐 중국 국내에서 중국회사와 공동으로 설립한 주식형 합영기업이며 보통 '합자기업'이라 한다. 중국에서는 개인이 합자기업이나 합작기업의 상대가 될 수 없다.

2) 합영기업은 적어도 두개 이상의 합자경영측이 있어야 하고 자본투자는 합자경영의 주요 조건이며 양측은 모두 정해진 비례대로 합영기업에 자본등록을 해야 한다. 투자자본은 현금 외에 실물이나 공업재산권 및 건물과 토지사용권도 가능하나 반드시 가격으로 환산해야 한다. 합영 양측은 마땅히 출자비례에 따라 이윤을 나누고 위험을 감수 한다.

3) 합영기업은 중외합영 측이 공동으로 경영관리한다. 합영 양측의 협상에 따라 이사회 인원수를 정하되, 이사회 명단은 주식의 비례에 따라 임명한다. 만약 한 측에서 이사회장을 맡게 되면 다른 한 측에서는 부이사회장을 맡게 된다.

(2) 중외 합작(合作) 경영기업

1) 합자기업과 마찬가지로 합작기업도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중국기업과 중국 내에서 공동 설립한다. 차이점은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른 약속이고 출자비례에 따라 이윤을 나누고 손익을 분담하지 않으며 계약식 합자 경영범위에 속하고 보통 '합작기업'이라 한다.

2) 합작기업은 일반적으로 중국 측은 현찰이나 토지사용권·노동력 등을 출자하고 외국측은 현금을 출자한다. 또 실물출자를 현찰로 환산하여 각 측의 출자비례와 수익할당 비례를 계산하지 않고 합작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따라 계약서에 할당비율을 정한다.

3) 중외 합작자는 이윤분배, 제품분배 또는 양측이 공동으로 정한 기타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한다.

4) 할당비율은 합작계약에서 먼저 정한다. 대다수 합작기업의 계약은

먼저 외국측이 투자를 회수하는 것을 보증하고 외국측이 먼저 또는 많이 이윤을 할당받는 것을 허가한다.

(3) 외자기업

1) 외자기업을 일명 외자독자기업(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 WFOE)이라고도 부르며 이는 중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중국 국내에 설립하고 총자본을 외국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기업이다. 외국기업은 중국 국적을 가진 독립경제 주체이며 이는 외국기업과 경제단체의 중국 경내에서의 분점(Branch)과는 다르다.

2) 합자기업과 합작기업에 비하여 외자기업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점이 많다. 그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외국투자자가 기업에 대한 100%의 통제권을 갖고 기업경영 관리를 스스로 책임지기에 기업경영 방법 중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피할 수 있고 경제적 효과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3자기업 중 외자기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개방을 확대함에 따라 중국기업의 도움 없이도 비교적 순조롭게 원자재·노동력 및 제품 판매시장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합영기업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중국의 합자경영 파트너를 찾아 협상해야 하는데 이로인해 시간과 인력을 허비하게 된다. 통계에 따르면 외자기업 설립은 보통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리지만 합영이나 합작기업 설립은 4개월에서 18개월까지 걸린다.

(4) 외자투자 주식회사

위의 3자기업에 비해 외자투자 주식회사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회에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것과 최저 등록자본이 인민폐 3000만RMB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기업자금 모금에 관한 많은 규제를 하기에 현재 외자투자 주식회사 수는 아직도 매우 적고 거의 대부분의 외자투자는 아직도 3자기업 형식을 취한다.

日, 중점육성 21세기신산업 7개 선정

일본 정부는 21세기 일본경제를 견인할 신산업으로 '정보가전'과 '연료전지', '로봇', '콘텐츠산업' 등 4개 분야를 선정했다. 또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유망산업으로 '건강·복지', '환경·에너지', '인재파견과 경영지원 등의 비즈니스지원' 등 3개 분야를 선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들 7개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2010년에는 이들 유망산업의 시장규모를 현재의 1.5배인 300조엔(약 3000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나카가와 쇼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은 17일 이런 내용의 '신산업창조전략'을 마련, 자문기구인 산업구조심의회에 보고한데 이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도 보고해 정부 산업정책의 기둥으로 삼기로 했다.

정보출처 : 해외벤처넷

유럽기업, 핵심사업 해외이전 추진

최근 유럽기업들은 생산라인을 중동국 국가로 이전하고, 연구·사무직종도 인도·중국 등으로 외주를 주는 등 핵심사업 해외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네덜란드 '로열필립스'는 올해 초 아일랜드 공장을 폴란드로 이전했고, 독일 전자업체 '지멘스'도 자국 내 휴대전화기 생산공장 2개를 헝가리로 이전키로 했다. 또 독일 '도이체방크'가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인도현지 연구인력에 외주를 주었으며, 네덜란드 ABN Amro 은행도 1700명 규모의 IT 업무를 중국·인도 등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미국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 리서치'는 2008년까지 서유럽내 80만개 이상의 금융·통신서비스 및 첨단기술 직종이 인도·중국·동유럽 등지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보출처 : 국정원